

여성정책 국내동향

2020년 4월 2차 (2020.4.16~4.3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주요 현안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 정부는 국무총리 주제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

-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목표로, ①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②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③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④중대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 4대 분야에서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 과제가 마련됨

<개선 사항>

구분	기 준	개 선
대책의 범위	• 변형카메라, 웹하드 등 범죄수단별 타겟형 대책	•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 대책
처벌기준 (법정형)	•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美 10년이하 vs 韓 1년이하 징역)	• 제작행위 공소시효 폐지, 판매행위 형량 확대 등 법정형 대폭 강화
형집행 (수사 및 처벌)	• 법정형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형량 구형·선고 • 텔레그램 등 폐쇄적 매체 활용으로 사전 적발 곤란	• 검찰의 구형기준, 법원의 양형기준 마련으로 법정형 수준으로 처벌 가능 • 신고포상금제, 잠입수사 도입으로 범행 초기단계부터 적극 적발, 수사
아동·청소년 보호	• 아동청소년을 피의자 취급, 구제의 공백 발생 • 특히 13세 이상 청소년 보호 공백	• 아동청소년을 법률에 ‘피해자’로 명시, 보호 대상임을 명확화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13세 미만→16세 미만), 보호 강화
처벌 사각지대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새로운 범죄 수법 출현으로 처벌공백 발생	• 디지털 성범죄물 소지·구매행위 처벌,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로 사각지대 해소
범죄수익 환수	•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범인 해외도피, 범죄수익 특정 곤란 시 수익환수 곤란	• 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 추정규정 신설, 추정보전 확대로 범죄수익은닉 원천 봉쇄 및 범죄 의욕 차단
피해자 보호	• 신속한 삭제 곤란 및 개인정보유출로 2차 피해 유발	• 24시간 원스톱 지원, 先삭제, 後심의 도입, 주민등록번호 신속변경(3개월→3주) 등 피해자 보호 강화
인식	• 오프라인 성폭력 범죄에 비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조 및 중대 범죄라는 인식 형성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23.]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6984

아동정책 수립, 관광사업 개발에도 양성평등한 관점 필요

☑ 여성가족부는 제34차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권고안 및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을 심의

- 아동정책을 총괄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의 성별 차이에서 오는 격차 해소와 건강·안전 문제를 고려한 과제를 추가하도록 개선 권고
-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관광 콘텐츠 제작 지침을 마련하고, 한국관광품질인증제도에 양성평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인증기준 신설 제안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23.]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706983

2020 청소년통계 발표

☑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은 청소년 인구, 건강, 학습·교육, 경제활동, 여가, 사회참여·의식, 안전·행동, 관계·의식 등을 담은 2020 청소년통계를 발표

- 2019년 초·중·고등학생의 96.4%는 남자와 여자가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양성평등 의식은 갈수록 높아지고 그 강도*도 세짐
* 양성평등에 관한 강한 긍정: (`13) 56.3% → (`16) 61.6% → (`19) 73.5%
- 2019년 초·중·고등학생의 97.3%가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고, 94.6%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4.27.]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706985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발족

☑ 법무부는 부처 내 양성평등 실현 및 성인지 정책 등의 자문을 위해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발족함

참고자료

- [법무부 보도자료, 2020.04.27.]
<http://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IzMzI5JTJGYXJOY2xWaWV3LmRvJTNGcGFzc3dvcmQIM0QI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l2cmdzRW5kZGVtdHIIM0QIMjZpc1ZpZXdnYW5JTNEZmFsc2UI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IM0QIMjZzcmNoQ29sdW1uJTNEJTl2c3JjaFdyZCUzRCUyNg%3D%3D>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젠더 폭력· 안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2020- 04-20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 범죄의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형의 하한을 설정하는 등 법정형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 근절에 기여(안 제1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5인)	2020- 04-2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하여 이와 관련한 법정형을 일괄적으로 상향하고 공개명령의 대상 범죄에 포함하며,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하여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 확대(안 제명 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5인)	2020- 04-21	현행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을 음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주체로 표현한 것 등은 부적절하여 '성적학대'등의 표현을 같이 명시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화(안 제17조제2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4인)	2020- 04-21	최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소위 'n번방'사건이 발생하면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집단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모의하고, 76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개별적인 폭행·협박 유무나 실행의 착수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형량 가중이 되지 않아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지 못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연령을 상향하고 강간죄 등의 예비·음모죄를 신설하며, 성범죄 피해자가 많아질수록 이에 비례하여 중한 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가중처벌 체계 마련(안 제305조 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4인)	2020- 04-21	'n번방' 사건의 경우 SNS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를 일일이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최근 관련자들이 수사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행위자의 사망이나 불특정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등에 관하여는 '형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독립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5인)	2020- 04-21	개인 또는 집단이 회유·협박·조종 등의 수단을 사용하거나 금전상의 이익 등을 대가로 아동·청소년·여성으로 하여금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성착취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권, 성적자기결정권 보호(안 제2조제1항제14호 신설 및 제44조의7제1항제1호 등)

젠더 폭력· 안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5인)	2020- 04-21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와 불법촬영 및 불법 반포·상영 등에 대한 상습범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성폭력범죄의 예비 또는 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 보완(안 제12조의2 신설 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현의원 등 10인)	2020- 04-24	온라인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유포하는 범행의 경우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한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범죄의 경우에는 법원이 검사의 기소와 별도로 몰수 및 추징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2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조의4,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 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2인)	2020- 04-24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의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으나 해당 범죄에 대한 제재와 사회적 감시망 구축 등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의 양상 중 하나로 나타난 광고 및 소개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자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을 제한함. 또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감시 강화(안 제11조제2항·제3항, 제56조제1항, 제59조제1항)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plaza/press.do>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청년 관점의 젠더갈등 진단과 포용국가를 위한 정책 대응방안 연구 - 공정 인식에 대한 젠더 분석	4.18	세계일보	“한국사회 성차별, 외국서 겪는 인종차별보다 더 무서워” [연중기획 - 청년 미래를 묻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00413524465?OutUrl=naver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실질화를 위한 젠더거버넌스 강화방안: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4.20	서울신문	사건 처리보단 정책 중심으로...중요성 커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1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21010006&wlog_tag3=naver
2019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	4.20	중앙일보	군대 성희롱 당한 女간부 11%...女하사가 주로 당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57939
	4.20	일다	생산·유통뿐 아니라 소비·소지도 디지털 성착취 행위	http://www.ildaro.com/8705
[제27차 젠더와 입법포럼]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법제도 모색 라운드 테이블	4.21	한겨레	스토킹·강간모의·성착취물 소지도 처벌"...n번방 관련 입법 속도낼까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41388.html
	4.23	중앙일보	[양성희 논설위원이 간다] 평등 인권 가르치는 성교육이 n번방 막는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60981

여성폭력 검찰통계 분석(Ⅱ): 디지털 성폭력범죄, 성폭력 무고죄를 중심으로	4.24	경향신문	[성범죄법 잔혹사] ⑤처음부터 수사관은 무고죄 운운...“내 말 믿어줄까, 두려웠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40600065&code=940100
	4.24	경향신문	피해자를 밀어내는 사법시스템, 숨은 범죄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플랫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41123011&code=940100
[제28차 젠더와 입법포럼] 21대 총선 평가 - 아직도 먼 길, 남녀동수	4.24	여성신문	“21대 국회, 지역구 30% 여성할당 반드시 의무화 해야”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546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 전망	4.26	한국경제	와글와글 “시부모님이 돌 지난 아기한테 소주를 먹였어요”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04246243H
여성폭력 검찰 통계분석(Ⅰ): 가정폭력범죄를 중심으로	4.26	서울신문	가정폭력 4.9% 줄었다고?... “일상도 통제, 신고조차 어렵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27016004&wlog_tag3=naver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4.16	BBC	4.15 총선: 여성의원 57명 역대 '최다 당선', 여전히 OECD 최하위권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2310044?xtor=AL-73-%5Bpartner%5D-%5Bnaver%5D-%5Bheadline%5D-%5Bkorean%5D-%5Bbizdev%5D-%5Bisapi%5D
4.18	한겨레	“돌봄의 사회화, 그 이상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김영란 연구위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7585.html
4.20	쿠키뉴스	여성 국회의원 의석, 20년째 ‘티끌 모아 티끌’	김은경 연구위원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78214
4.21	MBC	[법이 없다] “당신 고소한 사람 여기 있습니다”...신상 노출 여전	김정혜 부연구위원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40013_32524.html
4.21	뉴시스	‘디지털 성범죄’ 10대가 30% 차지...혹시 우리 아이도?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20_0001000140&clD=10201&pID=10200
4.21	여성신문	[여성논단] ‘여성 정치세력화’ 새 판 짜기 시작됐다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388

유관기관 연구동향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자녀양육가구의 돌봄 현황을 통해 육아분야 대응체계에 대해 점검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비한 단기적, 중기적 육아지원방안을 모색함**

참고자료

- [육아정책Brief 81호, 2020.04.14.] http://www.kicce.re.kr/main/board/view.do?menu_idx=29&editMode=ADD&board_idx=34895&manage_idx=38&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viewPage=1&search_type=title&yearData=%25&search_text=